
2019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안)

2019. 3.



해양수산부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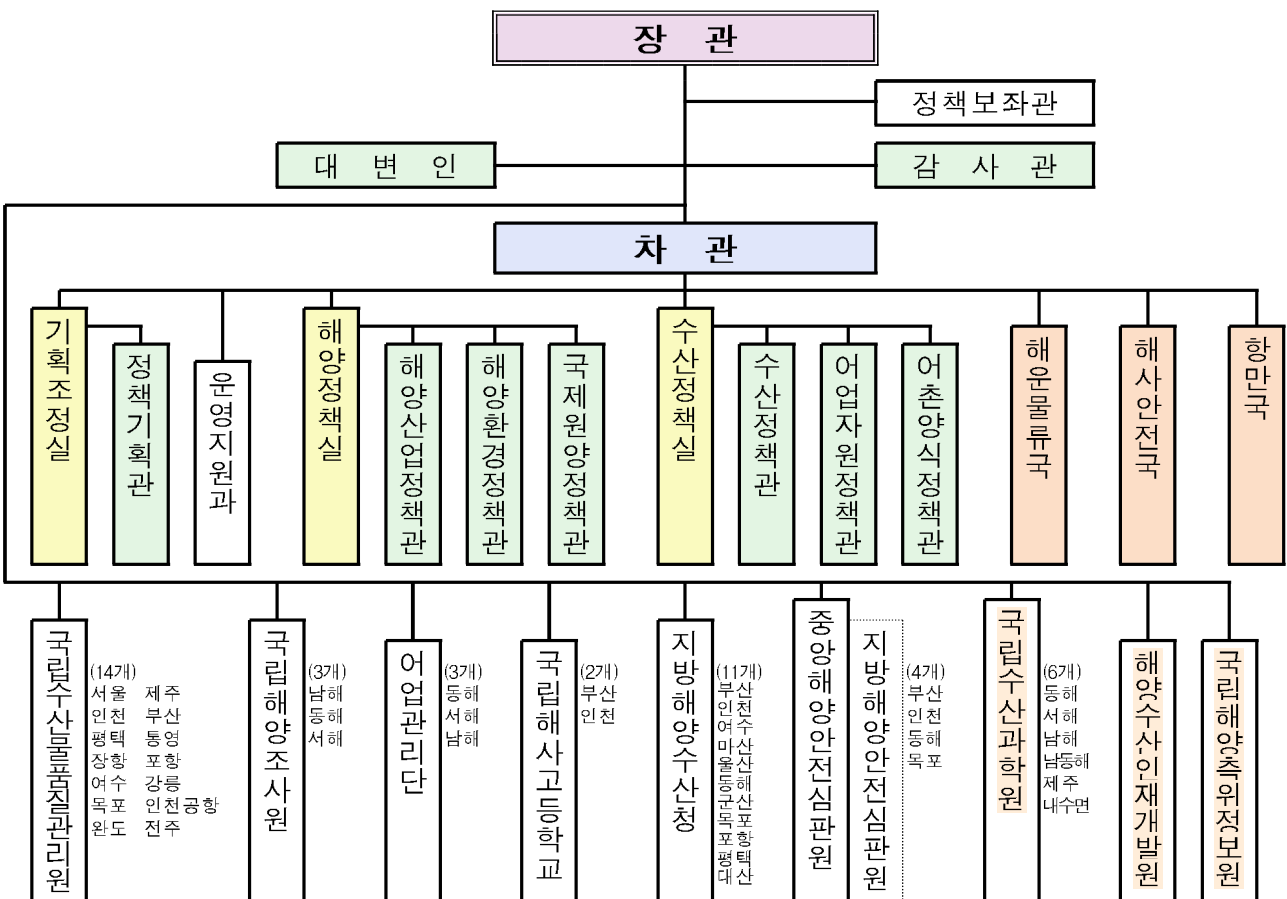
I. 기관현황	1
II. 2018년 성과와 평가	5
III.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7
IV. 2019년 업무추진방향	8
V. 주요 업무 추진계획	9
1.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9
2. 연안·어촌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16
3. 수산혁신 2030, 2019년을 수산업 혁신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21
4.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고 세계로 진출하겠습니다.	29
5.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35
6. 글로벌 해양리더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41

1 주요 소관업무

-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물류 중심지 조성**
-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과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 ◆ **건강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 강화**
-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 정비**
- ◆ **해양영토 수호 및 글로벌 해양리더 국가로 위상 강화**

2 조직

- ◆ 본부 : 1차관 3실 3국 9관(46과 4팀)
◆ 소속기관 : 69개(1차 22개, 2차 39개, 3차 8개) * 책임운영기관 : 3개



- ◆ 총 110개 법률 : 해양 28, 수산 44, 해운·항만 20, 해사안전 13, 기타 5
 - 공동소관 30개(해양4, 수산21, 해운1, 해사3, 기타1) 포함

*괄호 안은 공동법률

소관	주요 법률
해양 및 해양환경 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해양수산업과학기술 육성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4.17.공포, '19.4.18.시행)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19.1.15.공포, '20.1.16.시행) · 원양산업발전법 등 · (공동)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수 산 4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 영업조합법, 소금산업 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수산업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촌·어항법 등 · (공동)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8.12.24.공포, '19.4.25.시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해운·항만 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법, 국제선박등록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박투자회사법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한국해운조합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항만공사법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도선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9.1.15.공포, '20.1.16.시행) ·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 (공동) 물류정책기본법
해사안전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항로표지법 ·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관리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18.12.31.공포, '19.7.1.시행)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8.12.31.공포, '20.1.1.시행)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 (공동) 선박등기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기 타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공동)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 예 산

□ 2019년 총지출(세출예산 + 기금) 규모 : 5조 1,796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8년		'19년(B)	증감(B-A, %)
	본예산(A)	추경		
□ 총 지 출	50,458	51,045	51,796	1,338(2.7%)
○ 세출예산	45,184	45,771	46,745	1,561(3.5%)
○ 수발기금	5,273	5,273	5,050	△223(4.2%)

□ 중점 투자분야

- 어촌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뉴딜 300을 본격 추진하고, 감척 확대, 자율휴어제 지원 등 수산자원 회복에 대한 투자 확대
-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출자, 친환경 선박·설비 지원 등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박 관련 국제환경 규제 선제적 대응
- 항만별 특화발전, 선박 대형화 대응 등 글로벌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태풍·지진해일 등 항만 재해대응 강화
- 노후선박 현대화 등 해양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해양쓰레기 대응, 유류오염 예방 등 해양환경 관리역량 확충
- 스마트 양식, 스마트 해상물류 등 해양수산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해양관광 기반 구축,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등 신산업 육성

□ 분야별 지출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8년		'19년(B)	증감(B-A)	
	본예산(A)	추경		(B-A)	%
□ 총지출	50,458	51,045	51,796	1,338	2.7
○ 해운·항만	17,644	18,046	17,172	△472	△2.7
○ 물류 등 기타	6,873	6,927	7,443	560	8.1
○ 수산·어촌	21,573	21,703	22,448	875	4.1
○ 해양환경	2,409	2,409	2,741	331	13.7
○ 과학기술연구지원	1,958	1,958	2,003	45	2.3

◆ 공공기관은 총 16개 : 공기업 5개(시장형 2, 준시장형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기타 공공기관 7개

기관 구분	기능 및 역할
■ 시장형 공기업(2개)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 준시장형 공기업(3개)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 · 광양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울산항만공사	· 울산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 개선사업 및 해양오염 방지활동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개)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검사업무와 관련기술 연구·개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양수산 인력의 교육·훈련 및 해기사 시험관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바다숲·연안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과학기술정책 지원 및 R&D 기획 · 관리
■ 기타 공공기관(7개)	
한국해양진흥공사	· 해운선사 금융지원 및 해운정책 위탁 수행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항로표지 관련 연구 · 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개발목적기관)	·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연구 등
한국어촌어항공단	·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 조사 · 연구
한국해양조사협회	· 해저 지형 · 수로 조사 및 해양관측시설 관리 등
국립해양박물관	· 해양문화와 해양산업 유산발굴 · 보존 · 연구 · 전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개발목적기관)	· 해양생물자원의 수집 · 보존 · 관리 · 전시 · 교육

II. 2018년 성과와 평가

□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국정과제 80번)

- (해운재건 기반 마련)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18.4),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18.7),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 등 다각적 지원정책 도입

* 노후선 친환경선박 대체보조금('18, 268억원), LNG 연관산업 육성방안 수립('18.5)

- 공사 설립 이전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출범 4개월 만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신조 발주, 13개 중소선사 2,100억원 지원 확정

⇒ 외항선사 신조발주 증가, 매출액 증대 등 해운경쟁력 확보 견인

* 외항선사 선박 신조 발주: '16, 23척 → '17, 49척 → '18, 57척
외항선사 매출액: '16, 29조원 → '17, 32조원 → '18, 34조원(잠정)

- (항만물동량 증가) 부산항 21백만TEU 달성으로 세계 2위 환적항만으로 입지 강화, 인프라 확대·서비스 향상으로 항만물동량 지속 증가*

* 항만물동량: '16, 15.1억톤 → '17, 15.7억톤 → '18, 16.3억톤

☞ 해운재건의 성과 가시화와 함께 글로벌 해운산업 동향*에 따른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만 역할 확대 필요

* 글로벌 선사 대형화, 국제환경규제 강화(황산화물 규제, '20년 시행)

□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국정과제 62번)

-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소) 대응장비·인력 확충*, 해수부-해경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응역량 확충

* 1,500톤급 대형어업지도선 4척 확충, 인력 총원(88명), 접안시설 확보 등

- '17년 하반기부터 한·중간 본격적 대화를 통해 한·중 불법어업 공동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중국의 적극적 협력 유도

⇒ '18년 중국어선 불법침범이 '17년 대비 28% 감소*, 중국어선 불법조업률(승선조사 대비 나포 척수)은 6.3%→5.0%**로 감소(어업관리단 기준)

* 중국어선 불법침범 척수: '16, 12,033척 → '17, 2,796척 → '18, 2,019척

** 불법 조업률: '17년(승선조사 1,882척, 나포 118척) → '18년(2,429척, 122척)

○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 도서지역 1일 생활권 확대, 항로 단절 예방을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17년 27개 → ’18년 36개 항로)

- 여객선 현대화 펀드 제1호 선박으로 2만톤급 **대형 카페리***를 **국내 조선소에서 최초 신조**하여 완도-제주항로에 **취항**(’18.10)

* 건조가격 492억원(국가 50% 투자), 국제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3척 대형카페리 추가 신조를 확정(’18.8)하여 연안여객선 현대화는 물론, 중소 조선산업의 **新사업분야** 창출

○ **(인명피해 감소)** 연안선박 안전대책수립(’18.4), 해수부 상황대응, 해경 구조기능 강화로 해양사고 인명피해가 **’17년 대비 30.3% 감소**

* 해양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 : ’16, 118명 → ’17, 145명 → ’18, 102명(잠정)

☞ 인명피해(사망·실종)는 감소했으나 해양사고 건수(’16, 2,307건 → ’18, 2,671건)는 증가하고 있어, 사고 예방체계 강화와 구조역량 확충 필요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국정과제 84번)**

○ **(예방적 해양환경관리)** 先계획 後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공간 계획법**」(’18.4) 및 체계적 갯벌 복원·관리를 위한 「**갯벌법**」 제정(’18.12)

- 바다모래 채취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큰 이용·개발행위 대상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바다모래 채취 금지기간·구역 설정, 정밀조사 항목 추가 등)

* ’22년까지 바닷모래 골재공급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로 감축(해수부·국토부, ’17.12)

○ **(수산업 가능성 확인)** 참다랑어 외해양식 성공(상업출하, ’18.6), 수산물 수출 역대 **최고액 달성**(23.8억불)을 통해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확대

- 불법조업 단속, 자율휴어제 시범도입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 추세완화**

* 연근해 어업생산량(만톤): (’90) 147 → (’00) 119 → (’10) 113 → (’16) 91 → (’18) 101

☞ 해양플라스틱, 항만도시 미세먼지 등 해양환경관련 이슈가 부각

☞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관리·양식육성 등 본격화 필요

Ⅲ.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업무 추진 여건

- **(해양산업)** 해양바이오, 해양장비 등 해양 신산업*과 해양레저·관광 (세계관광시장 연평균 3.9% ↑ / 최근 10년)은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 전망
 - * 세계 해양신산업 시장: ('17) 1,638억달러 → ('22) 2,370 → ('30) 4,749('18.4, KMI)
-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해양레저·관광산업*과 함께 해양신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연안지역 활력제고 필요
 - * 취업유발효과(10억원당 취업자수) : 서비스업(7.3), 제조업(8.8), 관광업(18.9)
- **(수산업)** 세계적으로 어획에서 양식으로 생산전환 추세, 노르웨이 등 수산강국 중심으로 스마트 양식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진행
 -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감소, 어촌 인구감소 등 어려움 지속, 수산자원회복, 스마트 양식 및 수산물 수출상품화 등 체질개선 필요
- **(해운·항만)** '19년에는 선복량 증가를 넘는 물동량 증가로 수급 개선이 예상되나,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위기 등 불확실성 상존
 - 선사 규모화, 선박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해운체계 전환이 경쟁요소로 부상됨에 따라 우리 해운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필요

□ 업무 추진방향

- 국민 건강·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항만미세먼지, 해양쓰레기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사고 예방 등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
- 어촌뉴딜 300, 항만-도시 통합개발을 통해 연안·어촌을 재탄생시키고, 해양수산업 창업·투자와 해양관광활성화로 연안지역 일자리 창출
- 「수산혁신 2030계획」('19.2, 既발표/경장)에 따라 수산자원관리 제도 개편, 스마트 양식 전환, 유통·가공 고부가가치화 등 수산혁신 본격 추진
- 해운 위기극복에서 더 나아가 해운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모화·친환경화를 가속화하고 국내·외 물류망 확충 병행

IV. 2019년 업무추진 방향

비 전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
19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뉴딜 사업개소(누적): '19, 70개 → '22, 300개 ■ 수산물 수출액: '18, 23.8억불 → '19, 25억불 → '22, 27억불 ■ 해운산업 매출액: '18, 34조원 → '19, 37조원 → '22, 51조원 ■ 스타트업 성공모델(누적): '18, 50개 → '19, 100개 이상 → '22, 200개
주요 정책	
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① 항만 미세먼지 저감 ②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관리 ③ 해양공간 통합관리 ④ 해양오염원 관리 및 해양 생태계 보전 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등 사고예방 강화 ⑥ 해양사고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② 연안·어촌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① 어촌 뉴딜 300 사업 착수 ②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③ 유휴 항만을 새로운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 ④ 연안·어촌 접근성 향상 및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
③ 수산혁신 2030, 2019년을 수산업 혁신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제도 정착 ② 친환경·스마트 양식 확대 ③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수출·가공 산업화 ④ 소비자 중심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⑤ 귀어귀촌 지원 및 어촌 복지망 확충
④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고 세계로 진출하겠습니다.	①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 ②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 ③ 우리나라 항만을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조성 ④ 선원 등 해운물류 인력 양성
⑤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① 해양수산 스타트업 육성 ②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 ③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④ 해양바이오·에너지, 첨단 해양장비 등 상용화
⑥ 글로벌 해양리더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해양영토 수호 및 親해양문화 확산 ② 해외 해양수산 자원 확보 및 대양·극지연구 선도 ③ 신북방·신남방 등 국제 협력 강화 ④ 해양수산 남북 협력사업 준비

V.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중장기 목표 (~'22)		항만미세먼지 50% 이상 ↓, 해양사고 30% ↓ (~'22)
'19년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미세먼지 등 국민생활밀착형 정책 집중 추진 ◆ 취약선박 중심 사고·재난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핵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항만대기질 특별법 제정,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대책 수립 ③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및 e-내비게이션 시범운영

가. 항만 미세먼지 저감

①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 선박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20년 외항선 적용을 시작으로 내항선박도 '21년부터 단계적 적용

*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3.5%→0.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19.上)

-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19.上/국회계류 중)을 통해 항만대기질 측정망을 구축(환경부 협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

- 주요 항만인근에 배출규제해역(ECA)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여 강화된 연료유 및 속도기준 적용* 추진

* 연료유기준(의무): 황함유량 0.1% / 속도기준(권고): 12노트 미만

-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신설('19.下)하고, 일정등급 미만 화물차에 대한 항만·어항시설 출입 제한 추진

② 항만 미세먼지 저감 인프라 구축

- 정박 중 선박의 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육상전원공급장치 설비 구축(전력원: 선박 뱅커C유 → 육상전원)

* 부산항 4개 선석, 인천항 2개 선석, 광양항 2개 선석('18~'19)

- 주요 하역장비인 야드 트랙터 동력원 전환(경유→LNG)을 지원('19, 100대)하고,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 의무화('19~) 추진

나. 해양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관리

① 해양플라스틱 관리 기반 확충

-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하여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도를 정기적(분기별)으로 조사*('19년 시범)하고, 관련 DB를 구축

* ('20) 해수 표층 → ('21) 해저 퇴적물 → ('22) 해양 생물 등으로 단계적 확대

② 해양쓰레기 발생원 및 수거 관리 강화

- 내륙 지자체의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 의무* 부과를 추진(「해양폐기물법」 제정)하고, 홍수전 하천변 쓰레기 집중 수거(환경부 협업)

*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 확대로 육상회수를 촉진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명령제** 도입으로 원인자 책임을 강화

* 폐부표·폐어구 집하장 1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국가·지자체 등이 처리·재활용

** 해양폐기물 발생원인자에게 수거를 명하고 위반시 형벌 부과(「해양폐기물법」 제정)

-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에 대한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바다지킴이를 신규 도입(200명, '19~)하여 해안가 쓰레기 관리 강화

* 실태 조사(발생·처리 현황 등) 실시('19) 후 수집·운반 인프라 구축 검토

③ 대국민 인식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 및 정화활동 정례화,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 찾아가는 주민교육(폐부표 처리방법 등) 추진
- 중국과 공동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중국발 쓰레기 현황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등 주변국과 협력 체제 강화

⇒ 종합적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대책」 수립('19.上)

다. 해양공간 통합관리

※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통해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先계획 後이용' 체제로 전환(「해양공간계획법」 '19.4.18 시행)

① 해양공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全**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정책방향과 관리계획 수립 방향 등을 담은 「**해양공간 기본계획('19~'28)**」 수립('19.上)
- **경기만, 부산·경남해역** 공간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전남·제주·울산, 서·남해안 EEZ 해역에 대한 계획안 마련('19.下, '21년 전해역 완료)
- 해양공간계획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등을 위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운영**(‘19.上)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협의 절차, 전문기관 지정·관리 등

② 해양공간계획 지원 및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구축

- 해양공간 정보 검색·분석 시스템 구축('19~'22), **해양공간종합지도*** 작성('19~'21, 권역별·단계별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 빅데이터화

* 해역별 환경·특성, 이용현황, 해양생태계 가치 등을 전자지도화하여 제공

- **해양수산** 빅데이터 구축·공동 활용을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민간개방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18~'22)

* ('18) 163종 → ('19) 71종 → ('20) 160종 → ('21) 200종 → ('22) 176종(총 770종)

③ 체계적 연안정비 및 침식관리 시행

- 기후변화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연안침식·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 수립 추진('19.12. 고시)
- 과학적·종합적 침식 대응을 위한 한국형 연안침식 대응기술 실용화 연구* 및 3차원 입체 침식지형 측량 장비** 활용 시범사업 추진

* 연안침식 저감공법 실증연구, 침식예측 고도화 연구('18~'21, 150억원, '19년 17억원)

** 항공기 탑재용 수심측량 장비 국산화 기술개발(R&D) ('15~'19 133억원, '19년 21억원)

라. 해양오염원 관리 및 해양생태계 보전

① 육·해상 기인 오염원 관리 강화

- 제3차('19~'23)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을 수립('19.3)하고, 지자체의 오염저감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하수관거 등) 확충 지원*

* 1차: 창원·시흥·울산시, 2차: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추가 선정('19.下)

- 침몰선박 현장조사 및 잔존유 제거*, 해양으로 배출되는 하·폐수 수질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 추진('19.6~, 산업부, 환경부 협업)

* 관리대상 침몰선박 현장조사('19, 5척), 잔존유 제거 필요선박 조치('19, 2척)

②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 해양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8년 신규·확대 지정한 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기본계획(신규 4개, 재수립 4개) 수립 추진

* 지정현황(면적, 누계): ('17) 506.8km² → ('18) 1,777km² → ('19) 1,780km²

- 해파리 폴립과 갯끈풀의 상시 제거작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주·전남 팽생이모자반 모니터링 및 연구 추진('18~'20, 수과원)

- 갯벌복원 사업을 확대*하고, 갯벌법 시행에 대비한 하위법령 제정('19.下) 및 랍사르 습지도시 후보지 발굴 등 갯벌보전 체계화

* (신규) 보령 무창포, (계속) 서천, 고창, 웅진, 서산 갯벌생태계 복원

③ 해양환경 방제 및 환경분석 인프라 구축

- 대형 유류유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대형 방제선(5천톤급 1척, 758억원) 건조 착수('21, 실향배 배치)

- 해양환경조사연구원 개원('19.3)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 제도 개선*('19.12) 등을 통해 해양환경 분야 역량 강화

* 인증 상시평가체계 구축(연 1회 평가 → 수시평가), 인증기관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등 사고예방 강화

①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시설 정비

-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19.7)하여 해양안전 정책 수립 지원, 대국민 홍보 지원, 선박검사 품질 강화
- * 공단법 하위법령 적기 마련·시행('19.7) 및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19.12)
- 사고위험이 높은 좁은수로(5개), 위험물취급항만(3개)에 대한 통항안전성 평가 및 진단제도 개편(공사 허가기관의 진단결과 확인 의무화 등) 추진
-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19.3)하고, 액체위험물 안전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하역 안전시설* 등 설치

* 선박안전속도계, 외부충격 시 자동차단밸브 및 자동경보시스템 등

②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운항관리자 증원(106명 → 142명)
 - 여객선 주요항로에 안개관측용 시정계(지방청 2개, 기상청 25개)를 구축('19.12~)하고, 스캐너를 활용한 승선관리시스템* 전면 도입
 - * 기존 수기형식 승선관리를 스캔 방식으로 전환('18, 시범운영 → '19, 전면도입)
- 낚시어선 선장자격 강화 및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고, 구명뗏목 및 조난위치발신장치 등 인명구조 장비 설치로 낚시승객 안전 강화('19.上)
 - 어선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영업구역(영해) 위반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전경보(Geo-fence)*를 통해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19.5)
 - * 통신망(VHF-DSC, V-PASS, AIS)을 이용한 위치정보의 시스템 표출을 통해 어선별(연·근해), 업종별(낚시어선) 운항통제구역 지정 관리
- 마리나 입출항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19.上)하고 마리나업 선박 입출항 신고제도(승선자 명단, 비상연락망 등) 마련(마리나법 개정, '19.下),
 - * 마리나 정보화시스템 기능 개선 연구('18.8~'19.3)

③ 기술기반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 최대 100km까지 해상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19.上~)하고 **취약선박 중심으로 e-내비게이션 시스템 시범 운영 추진**(‘19.下)
 - **여객선·낚싯배** 등을 중심으로 송수신기를 보급('19.下~)하여 안전 항로 설정, 충돌·좌초 사전 경보 등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 안전항로 지원, 충돌·좌초 경보 등 **e-내비게이션 서비스**(‘21~)를 위한 근거법률 제정('19.12)
- **연안 100km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최대 1,500km 이상 통신 가능한 장거리 위치발신 및 통신 시스템 구축('19~'20)
 - * 통신망 구축 전까지 조업자제해역에는 위성 위치발신장치 설치·관리
 - 이와 연계하여, 월선위험 해역을 **가상경계지역(Geo-Fence)**으로 설정하고 조업현황을 모니터링, 이탈시 자동 알람기능 운영(~'19.上)
- 낚싯배 이용객 등의 추락사고에 대응하여 스마트폰 해로드앱과 **‘해상추락자 자동신고장치’**를 **상용화**하고 시범보급(500대, '19.12)
 - * 물에 빠져 의식을 잃어도 물반응 센서로 조난위치와 시간 등을 해로드앱으로 발송

④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교육시설 확충

- 일반국민·종사자 대상 해양안전교육(연중), 교육콘텐츠 개발('19.4), 현장 캠페인(매월) 및 해양안전엑스포('19.6) 등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 워터파크·해수욕장 등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운영**(5개소, 4억원) 하고, 복합형 해양레저체험교실(3개소) 및 생존수영 운영 내실화
 - * 해상생존장(구명조끼 착용, 비상탈출 등), 가상현실체험관, 안전장비전시관
- 해양특화 전문 안전교육시설인 **해양안전체험관** 착공(안산 '18.12, 진도 '19.3) 및 일반 국민의 체험관 이용 활성화 방안 검토('19.12)

바. 해양사고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① 체계적인 상황 대응 강화

- 해상사고 상황관리 및 초동조치 강화를 위한 **종합상황실 확대***, '비상상황 대응팀' 편성, **현장책임관 임명**** 등 대응체계 강화('19.6)

* 상황실장 직급상향(5급→4.5급), 전담인력 증원(3조3교대→4조4교대) 등

** 사고발생 즉시 피해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해 전담책임관을 지정하고, 현장 파견

- 강화된 정부 재난관리체계 등을 반영해 **위기관리·대응매뉴얼 전면 개정**('19.6) 및 재난대응 교육훈련* 내실화 추진

* 실제사고를 재연한 복합재난(선박화재·해양오염) 대비 범정부 합동훈련('19.10)

② 재난·안전 대응 체계 구축

- 해양사고 상황의 신속·정확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19.11)하여 안전시스템별 산재된 주요정보 통합*

* 해양안전종합정보, 항만운영 정보, 해양수산재난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선박모니터링 시스템에 표출

- 사고현장 신속대응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구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조직 설립 방안** 등 검토('19.7)

③ 세월호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지원

-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416생명안전공원 416재단 등)과 희생자 가족들의 **일상복귀 지원**(심리치료 등)도 차질없이 진행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 적극 지원

* 참사원인, 조사방해 의혹, 피해지원 현황 등에 대해 조사(청문회 등) 예정

중장기 목표 (~'22)		연안·어촌을 지역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
'19년	정책방향	◆ 어촌뉴딜 300 사업 본격 착수 ◆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 항만재개발 본격화 및 시민참여형 항만·도시 통합개발 정착
	핵심과제	① 어촌뉴딜 70개소 착공 및 2차년도 사업지 선정 ② 해양레저·관광복합지구 실시설계 ③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 고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어촌뉴딜 300 사업 착수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여 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

① 어촌뉴딜 300 사업 본격 착수

- 1차년도 사업 대상지 70개소의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2차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70개소 이상)을 위한 공모 추진('19.上)

* 여객선 기항지, 낙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을 우선 선정

-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선착장, 대합실 개선 등의 생활SOC 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우선설계·연내완공을 추진
 - 지자체와 협업 TF를 구성하여 공정관리 및 애로해소(인·허가 등) 지원

② 범부처 사업 추진 체계 마련

- 타부처 연계사업 발굴 및 효율적·실질적 협업 추진* 등을 위한 범부처 심의기구(가칭 어촌뉴딜300위원회) 구성·운영

* (타부처 연계사업) 농림부(일반농산어촌개발), 행안부·국토부(도서종합개발), 문체부(관광자원개발), 환경부(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추진('18.12, 국회제출)

* 사업 추진체계 보완, 민간위탁 근거 및 범위 구체화 등 관련 규정

③ 지역 거버넌스 내실화

- 주민 참여형 개발을 위한 **어촌뉴딜 지역협의체**와 지역 맞춤형사업 발굴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의 상시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 디자인·건축·공동체 등 전문가 35팀(135명)이 사업기간 종료후 3년까지 지원

- 어촌뉴딜 지역협의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별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지자체의 관심·참여 유도

나.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① 광역권 해양레저·관광 특성화

- 해역별 특성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로 개발




* 수도권(도시형 마리나), 서해안권(해양생태), 동해안권(해양레저), 제주권(수중레저) 등

**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 해양레저 창업지원 기능이 종합된 복합시설

-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는 기존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특성화 조성, '19년 3개소 우선 개발***

* 군산 마리나형(430억원), 강원 고성·제주 수중레저형(410/400억원) 조성('19~'21)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 주요 기반시설>

기능	주요 기반시설	예시
레저선박 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계류시설 및 드라이스택 • 레저선박 수리 세정시설, 상하가 시설 	
체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빙풀, 카누카약장, 인공서핑장 등 • 해양레저 관련 장비 대여 지원시설 	
취·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 분야(마리나 정비,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 • 취·창업 컨설팅/• 스타트업 입주 공간 지원 	

- 해안누리길-자전거길-해안도로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19.5)하여, 4계절 체류형 해양관광을 활성화**

-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MOU** 체결('19.2, 해수·문체·국토·행안)에 따른 차관급 협의체 구성으로, 섬 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 ① 섬 접근성 개선(해수부), ②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해수부, 문화부), ③ 숙박·식사 인프라 확충(행안부), ④ 관광정보 제공 등 홍보 확대(부처 공통)

2 4대 新해양관광산업 육성

- **(해양치유) 시범지구***를 조성(완도, '19~'21, 총 189억원)하여 해양치유 선도 사례로 육성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제정 추진('19, 국회 계류 중)
 - * 완도군 포함 해양 치유환경 우수지역 4개소 선정·조성 추진
 - 지역별 치유환경·자원을 고려한 특화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치유자원(갯벌·해양기후 등) DB** 구축, 전문인력 양성('19.下~) 추진
 - * 건강 증진형, 스포츠 재활형, 피부질환 치료형, 관절통증 완화형, 심리 치료형 등
 - ** 해양치유가능자원 발굴·실용화 연구('17~'19, 51억원)
- **(마리나) 마리나산업 생태계**(선박 제조·수리·유통·보험·금융 등) 구축을 위한 **마리나 비즈센터***와 **거점형마리나**(울진 준공, 창원 착공) 조성
 - * 부산(480억원)·경남(190억원) 마리나산업 비즈센터 건립 추진('19~)
 -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마리나 정비업 신설 및 요트 대회(클리퍼) 유치 등 마리나 홍보 적극 추진
- **(수중레저) 수중 환경과 개발여건 우수지역을 선정**하여 육상(다이빙 교육시설, 장비 대여소 등), 해중(인공어초, 해조류 식재 등) **시설 조성 지원**
 - 레저업자와 어촌계 상생을 위해 어업인 수익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다이빙 강사 육성도 지원 추진
 - * 어업인 휴게시설을 탈의·샤워장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수익사업 발굴
- **(크루즈)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항로 다변화를 위한 일본·대만·홍콩 등 **Port-Sales 강화** 및 **크루즈 체험단 운영**
 - * 인천남항 크루즈 전용부두 및 크루즈 터미널 운영('19.4)

다. 유휴 향만을 새로운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

① (부산북항) 해양관광·해운금융 중심지로 육성

- 1단계 북항 재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준공('22.4)될 수 있도록 잔여 기반시설*을 연내 착공하고 미분양 필지 매각 추진

* 충장대로 지하차도('19.8), 민자 환승센터('19.12) 등 8개 사업

- 시민참여를 통해 마련한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확정('19.2)하고, 사업 시행자 공모('19.6), 경자구역 지정 추진('19.4 지정요청, 산업부 협조)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 설립('19.2)

② (인천항) 환황해권 중심 해양관광·레저 향만으로 도약

- 1·8부두 재개발은 시민 참여를 통해 마련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사업화 방안을 수립('19.上, 인천시·IPA·LH)하여 본격 추진

* 제안서 제출('19.上) → 실시협약 체결('19.12) → 사업계획 수립('20.8) → 사업 착수('21.7)

- 8부두 내 유휴 곡물창고를 청년창업 및 문화혁신 공간으로 조성하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인천시, 민간 등)을 선도 사업으로 착공('19.7)

* 청년 창업·지원공간, 극장 등(12천㎡) / 396억원 / '19.7~'19.12

- 영종도 투기장 재개발사업* 착공('19.3) 및 부지조성 사업 추진

* 종합 관광레저단지 부지 조성(332만㎡) / 4,103억원 / '18~'21((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③ (광양항) 신소재·복합에너지 등 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 3단계 투기장 재개발 사업 실시협약 체결(YGPA, '19.6) 후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 실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19.12)

- 묘도 재개발 사업 착공('18.4)에 따라 부지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복합발전·신소재 등의 융복합 에너지허브로 조성

* 묘도 매립지 312만㎡ / 부지조성 2,756억원 / '15~'29(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주))

④ 지역거점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

- 거제 고흥항 1단계 주거시설, 한방병원 착공('19.下) 등 상부시설 개발, 2단계 미분양 필지(7만㎡) 매각 및 잔여 3단계* 사업 착공('19.9)

* 부지조성 31만㎡/ 2,200억원 / '19~'21(거제빅아일랜드PFV)

- 포항구항은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제안서 제안('19.下, 포항시)

라. 연안·어촌 접근성 향상 및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

① 연안 여객선 현대화 추진

- 연안 여객선 현대화펀드를 활용한 대형 카페리 3척 건조 착수 및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 지원 확대 추진
- 연안 여객선 도입자금에 대한 이자비용(2.5%)을 지속 지원(기존 38척 외 추가 선정)하고, 국고여객선 대체(1척)도 추진

② 여객선 이용 편의 증진

-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여객선·접안시설·터미널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와 관련 규정정비* 등 추진

* 여객선은 규모에 맞는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후 신조선은 건조 시부터 적용, 기존선은 개선권고 및 일정 유예기간 후 적용

- 도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를 신규 지원('19, 10억원)하고, 도서민 소유 비영업용 차량의 운임 할인을 확대*

* (기존) 차량운임의 20%(상한액 없음) 정률지원 → (확대) 1000cc 미만 승용 차량은 50%까지, 1600cc 미만 승용 차량은 30%까지 운임지원 확대

- 도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1일 생활권 미구축 항로, 2년 연속 적자항로에 대한 운항 결손금 지원 확대('18, 36개 → '19, 40개)

중장기 목표 (~'22)		수산업 매출액 : ('16) 67.2조원 → ('22) 80조원 달성 어가 소득 : ('17) 49백만원 → ('22) 60백만원 달성
'19년	정책방향	◆ 수산업 혁신 2030계획 1단계 본격 추진
	핵심과제	① 정부직권 TAC 지정 근거 마련(개정안 국회제출) ②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2개소 착수 ③ 수산물 수출 25억불 달성 ④ 수산물 이력제 시범사업(참조기, 굴) 시행

<수산업 혁신 2030 계획>

□ 추진배경

- 수산업 분야는 수산자원 감소, 어가인구 감소, **산업전반의 경쟁력** 저하, 어촌사회 붕괴 우려 등 **당면한 위기 심화**

⇒ 중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을 통한 수산업의 혁신성장 체제 구축

□ 계획개요

- 수산자원 관리부터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단계 혁신을 위한 중장기 '**수산업 혁신 2030 비전**'과 이행계획인 '**4개년('19~'22) 실행계획**' 마련

⇒ 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2030년까지의 수산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4개년 계획에 따라 '19년부터 제도개선·예산확보 등 1단계 과제 추진

□ 주요 정책방향

구분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 추진방향
연근해어업	생산지원 중심 ⇒ 자원관리 중심	⇒ TAC 확대, 불법어업 근절 등 자원 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
양식어업	소규모·재래식·사후 대응양식 ⇒ 규모화·스마트·예방양식	⇒ 기업화, 스마트화를 통한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어업으로 혁신
어촌지역	생산지원 공간 중심 ⇒ 정주·여가 공간 중심	⇒ 어촌뉴딜 300 사업, 어촌관광 등 혁신사업으로 어촌활력 제고
수산기업	단순 기업 비용 지원 ⇒ 기업 창업·성장 지원 중심	⇒ 수산기업 창업·투자 확대로 자생력 갖춘 산업으로 전환
유통·소비	공급자 편의 중심 ⇒ 소비자 권리 중심	⇒ 유통시설 현대화, 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문화 정착

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제도 정착

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 現 자율참여 방식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19.下)

*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어획 허용

- TAC 조사원 단계적 증원('18, 85명 → '19, 95) 및 TAC 전담부서 지정('19.下), 상시 어획보고 및 어획량 관리를 위한 TAC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연근해 전체 어획량 중 TAC 관리 비율 확대*를 위해 업종(대형 쌍끌이 등) 및 어종(갈치, 참조기 등) 참여 협의 지속('19.下)

* 전체 어획량 중 TAC 관리 비율을 現 25%에서 '22년까지 50%로 확대

② 어업 구조 개편 및 어획노력량 감축

- 엄격한 TAC 적용과 감시·감독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업계에 어구·어법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 추진('19.3)

* (시범사업 요건 예시) 어획량 100% TAC 적용, 지정위판장 양륙, TAC 조사원 조사 후 유통, 선박위치 모니터링시스템 의무 장착

- 한·일 어업협상 관련 입어 업종(대형선망 등)을 우선 감척하고, 상습적 불법조업과 자원남획 업종 중심의 감척 추진(감척계획 공고, '19.3)

* 근해어선 20여척(저인망 등) 및 연안어선 180여척 감척 추진('19, 332억원)

-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되 어선원 실직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율휴어제 지원사업 도입(고등어 대형선망 '19.4~7)

- 먹이생물인 멸치의 자원량 관리와 어린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해 세목망 사용을 제한하고, 자원회복대상종 및 지정 위판장소 고시*

* ('19) 참조기, 갈치 → ('20) 멸치, 고등어, 전갱이 등

③ 어획 및 유통단계 불법어업 예방

<어획 단계>

- 조업구역 위반 차단 등을 위해 어선 위치확인 시스템(최대 1500km)을 구축*('19~'20)하고, 드론(3대, 신규)을 활용한 **해상입체단속 강화**
 - * 조업자제해역 등은 통신망 구축 전까지 위성 위치발신장치 설치·관리
- **불법어구의 원천적 수입 차단**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HSK 개정 관련 관세청 등 협의 추진('19.下,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 * (현행) 사용이 금지된 어구 제작·판매 금지 → (개정)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
- 불법신고 App 개발과 신고 포상금(10만원→최대 600만원) 확대를 통해 **어업인 감시·신고 유도**('19.2~)
- 불법어선 **재허가 요건강화, 과징금 대체 대상 축소**('19.下 「수산업법」 개정)
 - * (현행) 재허가 제한 10개월~2년 → (강화) 불법어선 리스트 관리 및 재허가 요건 강화
- 공조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면세유 제한** 등으로 실효성 있는 불법어업 대책 마련
 - * (현행) 어업정지 30~90일 → (강화) 2차 또는 3차 위반시 허가 취소('19.上)

<유통·소비 단계>

- 해상단속 중심에서 양륙·어구사용 등 상시 모니터링* 가능한 **어항 검색 제도 도입**('19.下,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 * 어업관리단, TAC 조사원, 수협 등 상호 연계를 통한 감시·감독 체계 정비
- 어린물고기 뼈째회, 암컷대게 요리 등 식습관 개선 대국민 캠페인과 자원고갈어종 '**신호등 표시제***' 도입('19, 시범추진)
 - * 자원고갈 어종은 포장·판매단계 신호등 표시(심각 빨강, 우려 주황, 풍부 초록)

나. 스마트·친환경 양식 확대

① 스마트·외해 양식 플랫폼 구축

- 스마트 양식장과 연관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부산 '19~'21)하고, 내수면 스마트 시범양식장 조성(충북 괴산, '19~'20) 추진
 -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외해 적합어종, 적지 및 가공·유통 연계 등을 고려한 종합 타당성 연구·조사('19.上) 실시
- * 노르웨이 외해 플랜트: Salmar社は 석유플랜트 기술을 접목한 외해 플랜트 양식장 1조를 건조하여('17.6) 연어 7,500톤 시범양식 중(직경 110m, 높이 67m)
- AI기술 등을 접목한 스마트양식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및 주요 전략품목별 첨단 양식기술 연구개발* 추진
 - * 해수·과기·산업부 3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 예타신청 추진('19~)
 - 소규모 양식어가 보급용 자동먹이공급시스템, 어체 측정장치 등 스마트기술 개발('19~'21, 24억원) 및 보급*
- *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상자 선정·지원(연간 10억원, 국비 40%, 지방비 50%, 자담 10%)

② 양식산업 투자제도 개선

- 고부가가치 대표양식 품목인 참치 대량 양식을 위한 '참치펀드*'를 출시('19.3)하여 양식산업 실물펀드 투자 확산
 - * 금융투자사와 참치업계 출자를 통해 50억원 규모의 펀드 신설(3년 상환)
 - 참치펀드 성공 시 외해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양식 투자펀드 출시
- 참다랑어, 연어 등 사업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기업 진입 확대 추진('19.下,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일반면허 신청시 어업회사법인*에게 어촌계 등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어업권 취득 허용('19.下,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 * 어업회사법인 설립 시 법인 규모에 따라 비어업인 자본 90% 이상 출자 가능

③ 친환경·질병 예방형 양식 정착

- 양식어업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19.下, 법률 제정 추진)을 통해 어장 환경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표준사육매뉴얼*도 제작·보급

* ('18) 전복, 넙치 → ('19) 조피볼락, 강도다리 → ('20) 돔류, 송어, 쥐치

- 사육수 내 질병을 차단하는 수처리 시설을 보급*하고, 배합사료 연구품종 확대(넙치→기타품종) 및 현장적용 시험('19, 완도) 등 추진

* 15개소(82억원) : 순환여과 8개소, 바이오플락 2개소, 용수정화 5개소 보급 추진

- 양식용 약품 안전성 재검증*을 지속 추진하고 수산물 법정전염병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수산물 질병관리** 강화

* 허가 후 10년이 경과한 약품(649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재평가('18~'25, '19.下 10개 完)

** 법정전염병 지정 확대('18, 20종 → '19, 23종) 및 살처분 대상 질병 확대('18, 1종 → '19, 2종)

- 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양식장 안전성 조사 확대* 및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18, 189개소 → '19, 219개소 → '22년까지 300개소)

* 중점관리품종(넙치) 연1회, 관리품종(뱀장어, 송어 등 4종) 3년 내 1회, 일반품종 5년 내 1회

④ 기후변화 관측 강화 및 특화 품종 개발

- 실시간 어장환경 관측망*을 확충하고, 고수온 내성품종 개발과 전복 종자사육동 증축('19, 착공)을 통해 우량종자 개발·보급**

* 빈산소 관측 : '19년도 1개소 증축(10→11) / 수온 관측 : ('18) 54개소

** 골든씨드 프로젝트('13~'21, 748억원) 및 전복사육센터 증축('19, 22.5억원 등)

- 수산물 양식 Map* 제작 및 해역별 특화 양식품종** 육성 유도(~'22)

* (예시) 강도다리 한계수온은 26℃로 양식적지는 경북 울진 기준 이북

** (예시) 천수만(여름철 수온 30℃까지 상승)의 경우, 현재 주 양식품목은 조피볼락 (한계수온 28℃)이나, 송어(31℃), 해만가리비(30℃) 등으로 품종전환 유도

다.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수출·가공 산업화

① 수산식품 산업 인프라 조성 및 육성

- 원료·가공·R&D·수출이 연계된 **수출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제 수준의 위생·관리시설을 갖춘 **수출물류센터 완공**(’19.12, 인천항)
 - * 부산수출가공클러스터(예타신청, ’19.下)/ 목포수출가공클러스(예타면제 확정)
- 영세 수산가공업체의 가공시설 도입 및 현대화를 지원*하고, 가공업체를 집적한 **수산식품거점단지 구축**(조성 중 5개소, 신규 2개소)
 - * 산지가공시설(66개소), 가공설비(90대), 물김세척수 정수시설(48개소)
- 어묵·전복·굴 등 **차세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가공·수출 기반시설 확충,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 **맞춤형 육성책*** 추진
 - * 수출유망상품화(’19, 15억원) 및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19, 40억원)
- 1인 가구, 여성 경제인구, 노령층 증가 등 사회구조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간편식·건강식 식품 개발 지원**(’19, 56억원)

② 수산식품의 수출확대 지원

- 잠재력 있는 **新시장** 선점을 위한 **시장개척단*** 확대 및 수산식품 글로벌 영리더 육성을 위한 **청년 수출개척단**(年 20여명) 추진
 - * 바이어 수출상담회, 현지 유통업체 등 수산현장 방문, 수산 관계자 간담회 등
- 할랄 인증 표시의무화(’19, 인니), 지속가능한 수산물관리인증 확대(도쿄올림픽 공식규격 지정) 등에 대응하여 **국제인증 취득지원**(’19, 9억원)
- 수출지원센터 성과평가 및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센터 입지를 조정하고, 수출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인큐베이터’** 운영 확대
 - * 수출지원센터 인큐베이터 입주기업 확대 : (’18) 16개사 → (’19) 22개사

라. 소비자 중심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① 수산물 유통인프라 혁신

- 산지거점유통센터(FPC)* 1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유통효율화 추진

* 4개소(강릉·인천·장흥 완공, 1개소 신규공모) / ** 2개소(호남권·인천권, '16~'20)

-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양륙-위판-배송)을 위해 청정위판 모델을 구축('19, 1개소)하고, 위판장에 대한 위생 평가기준* 마련('19.下)

* 위판장의 위판시설, 용수, 장비·기구 등 관리·설치 및 작업자 준수사항 등 규정

- 천일염 유통센터 건립(신안, '19~'20) 및 천일염 생산시설 개선 지원, 안전성 조사 실시를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 마련

② 수산물 이력제·원산지표시 강화

-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굴비·생굴을 대상으로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19~'21) 시행

-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업·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물품·인력 등 우선 지원 추진('19, 19억원)

-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및 지도·단속 인력 보장**

* 12품목 → 15품목 / ** 단속공무원 17명 및 명예감시원 135명 증원

③ 수산물 수급관리기반 등 강화

- 상시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수산물 수급진단 종합시스템' 고도화('19~'20) 및 분석된 정보에 기반한 가격안정정책 추진

-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제고를 위해 수산물 민간수매 자금 지원('19, 587억원)의 환류기능* 강화

* 민간사업자의 저장물량 방출명령 및 방출 수행실적에 따라 지원대상 및 금액 반영

마. 귀어귀촌 지원 및 어촌 복지망 확충

① 귀어·귀촌 지원 강화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로 귀어를 촉진하고, 선도어업인 등을 ‘귀어닥터’로 임명('18, 77명 → '19, 100명)하여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수협법」에 따른 어업인이면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마련('18.7. 국회제출)

- **청년어촌정착자금***(‘18, 100명 → ‘19, 200명), **귀어학교**(‘18, 3개소 → ‘19, 4개소) **확충**을 통해 청장년층의 어업·어촌 진입 적극 지원

* ('18) 귀어인 대상 → ('19) 귀어인 +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 귀어·귀촌 희망인(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정보 제공 및 도시민 관심 유도 등을 위한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지원('19.5)

* 귀어·귀촌 정보 안내관, 성공사례·설명회 등 맞춤 상담, 명사 초청 강연

② 어촌 복지망 확충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 인상('18, 60만원 → '19, 65만원) 및 **공익형 직불제 도입*** 타당성 검토 추진

* 자원보호, 어장 환경 보전, 안전한 수산물 공급, 경영이양 등 어업인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각종 공익형 직불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19)

- 어촌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어업도우미 지원조건 개선*** 추진('19)

* 중증질환자 지원일수 확대, 근무시간 산정기준 개선 등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대상 확대*** 및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용역**’를 통해 어업인 직업성 질환 예방체계 강화('19)

* 어업안전보건센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낙도→낙후 어촌)('19)

** 검진항목, 대상인원 등 특화검진 세부 설계 용역 추진

중장기 목표 (~'22)		세계 5위 해운강국 재도약 (해운산업 매출액: '18, 34조원 → '22, 51조원)
'19년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재건 지속적 이행과 글로벌 물류망 복원 ◆ 10대 신항만 특화방향 마련 및 신항 신규 지정 추진
	핵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항 선박 신조·개조 180척 지원 ② K-GTO를 통한 터미널 운영권 확보 ③ 부산항 제2신항 입지결정 등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

가. 해운기업 경쟁력 강화

① 해운기업의 자산경쟁력 확보

- 60척 이상의 외항선박 발주('18~'22, 200척 신조발주)를 추진하고, 既 발주 선박('18, 57척)에 대한 지원 관리도 철저

* '19.上 제출 수요('18.11): 14개사 37척(컨 6, 벌크21, 탱커 8, 기타 2)

- 노후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선가의 약 10%를 지원하는 선박대체 건조 지원사업('19, 85억원) 지속 추진
- 선박신조에 대응하여 '컨'박스 신규 수요('19.上, 6개사 6,728억원)를 안정적으로 지원(후순위 보증, 40%)
-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을 상시 지원체제(연 3회이상 공모)로 구축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대상·방식 다변화*
- '19년 1차 지원으로 중소선사 선박 7척, 596억원 지원 추진

* (투자대상)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확대
(금융방식) 국취부나용선(BBCHP) 외에 나용선(BBC), 단기용선(TC) 등도 검토

② 해운물류기업 규모화 촉진

-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8개 '컨'선사(운항 선복량 10,000TEU 이상)를 6개 이내 선사로 통합 추진('19~'20)

- '컨' 선사 통합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회사채 매입*, 통합 선사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50%) 등 지원

* 지원규모: 통합과정 최대 1,000억원 / 통합 후 운영 최대 2,000억원

- 항만여건에 따라 터미널 운영사 합병 등을 추진하여 운영사를 대형화(11→6~7개)하고, 인천항 '컨' 터미널도 통합 추진

* 부산 북항: 3개 → 1~2개('19) / 부산 신항: 8개(건설중 3개) → 4~5개(~'25)

- 통합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개선(야드 재정비 등) 비용을 지원하고 한시적 임대료 인하(1년간 15% 등) 추진

③ 해운산업 상생 협력체계 구축

- 선·화주 상생노력, 사업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세제·통관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20)

* (화주) 국적선사 이용률, 장기계약 비중 등 / (선주) 운임·선복 혜택, 서비스 안정성 등 「해운법」 개정 후,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정부사업 가점, 통관절차 간소화 등 제공

- 3개월 이상 운송계약 시, 운임 우대, 최소 제공화물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정거래 질서 정착

- 비상시 해운물류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시행('20.1)에 대비하여 기본계획 수립, 국가필수도선사 지정('19.3) 등 추진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 기능유지법('19.1월 제정)

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

① 수출입 해운서비스망 강화

- 한진해운 파산 이전으로 해운물류망 복원을 위해 미국, 유럽 등 원양항로 신규개설 및 선복량 확대* 추진

⇒ 구주항로 2.3만TEU급 신조 12척 투입('20)으로 선복 증대

미주항로 1.5만TEU 신조 8척 투입('21)으로 항로 개설* 및 선복 증대

* 미주동안은 현재 국적선사 선박 없이 외국선사 선박을 구매하여 서비스 중
→ 향후 국적선박 투입을 통해 항로 개설 + 미주서안 선박 대형화 추진

- 연근해 선사 수요가 있는 한·중, 한·일·러 카페리 항로 개설* 추진

* 한·중(평택 - 장하), 한·일·러(속초-키타큐슈-슬라비안카) 등

② 해외 물류거점 확보

- 선사·하역사·항만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K-GTO(Global Terminal Operators)를 육성, 해외터미널 등 물류거점 확보 본격화

- 성장가능성이 큰 아시아권 터미널 운영권 확보 추진('19)

* 말레이시아,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등

⇒ 중장기적으로 싱가포르(PSA), 두바이(DPW) 등 해외 항만 공기업과 같은 세계적 항만 운영사로 성장시켜 해외 물류거점 강화

- 사업화 가능성과 실수요자가 있는 해외항만*을 해외항만개발 파일럿 사업으로 선정, 컨소시엄(건설사·선사·항만공사 등) 구성·집중 지원

* 베트남(락후엔신항), 미얀마(킹스뱅크항, 띠라와항) 등

- 국내 물류·수출입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투자방향서 체결, '18.11) 건립·운영(~'21)

다. 우리나라 항만을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조성

① 부산항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

- 부산항 제2신항 계획을 조속히 확정(신항만건설기본계획, '19.上)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 신규 컨테이너부두(2-6단계) 2선석, 피더부두 2선석을 연내 착공하고, 현재 공사 중인 컨테이너부두 6선석을 차질없이 공급('22)
- 남 '권'지역 항만배후단지(137만㎡, '16~'21)를 조성하고, **웅동 지역 2단계 배후단지**(112만㎡) 민간투자 유치 추진('19.下, 사업시행자 선정)
 - LNG병커링 터미널 및 수리조선단지 다양한 지원시설 민자유치

② 인천항을 對중국 물류 허브로 육성

- 물동량 증가 추세(최근 5년간 연평균 7.5%)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항 1-2단계**(5선석) 적기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반영** 추진('19.上)
-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공급(66만㎡, '19.12)하고, 인접한 인천 LNG 기지의 냉열을 이용한 **냉장·냉동 클러스터 조성**
- 22만톤급 **크루즈 전용터미널** 개장('19.4), **국제여객터미널** 준공('19.6) 및 배후지원시설 **부지조성**(114만㎡, '19.5) 추진

③ 광양항을 국내최대 항만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 여수국가산단 물류 수요에 대응하여 **석유화학부두를 증설**(2선석) 하고, 배후단지 내 **전력공급시설**(154kV)을 설치하여 물류·제조기업 유치
- 대형선박의 안전입항 지원을 위한 특정해역 내 **암초 제거 사업**을 착수('19.12)하고, **울촌1산단 전면항로 준설** 완료('19.12)
- 광양항 이용선박에 대한 급유·급수 등 **역무서비스**를 공급하는 **역무선 전용 계류시설인 여수신북항** 건설 추진('19, 방파제 준공)

④ 항만별 특화 개발을 통해 기간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

울산항	세계 4대 액체항만	평택·당진항	수도권 新산업거점
<p>▶ 오일허브 1단계 사업성 확보를 위해 유치시설 다양화 검토</p> <p>* 유류 → 유류+LNG</p> <p>- 석유공사 중심으로 대체투자자 구성 ('19.上)하여 상부공사 조속히 추진</p> <p>▶ 오일허브 2단계 기반조성(방파제 등)</p>		<p>▶ 국내최대 자동차 수출입관문으로서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113만㎡) 추진</p> <p>* 세계적인 자동차물류기업 사업참여 (알레니우스윌헬름센)</p> <p>▶ 우드펠릿을 활용한 복합발전용 연료 공급부두(2선석) 확충('19.7, 착공)</p> <p>▶ 평택-당진 간 연결도로(3.1km) 건설 ('18~'23)을 통해 접근성 향상</p>	
			

새만금신항	새만금 선도사업	목포항	전남권 물류거점
<p>▶ 항만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중</p> <p>* 진입도로(0.7km), 방파호안(3.1km) 등 / '17~'23</p> <p>▶ 부두규모 대형화(5만톤급) 및 재정전환(민자→재정) 협의</p> <p>*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반영('19.上)</p>		<p>▶ 자동차(광주 기아차) 물류거점으로서 자동차부두(1선석) 확충('19.3, 설계)</p> <p>▶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48만㎡), 예·부선 전용부두 건설 추진</p> <p>▶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1.8km) 건설을 통해 교통 안전성 강화</p>	
			

라. 선원 등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① 선원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

- 선원 수급, 해기인력 양성, 근로여건 및 복지 개선 등을 위한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 수립*(‘19.1) 및 선원 취업 연계사업 신설**

* ’23년 외항상선 승선 한국인 해기사 1만명 유지, 한국인 부원선원 1천명 양성 등을 위해 인력 양성, 제도 개선, 취업지원 종합 추진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4억원, 150명), 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5억원, 200명)

-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체결국을 확대(36개국 → 38개국)하고 글로벌 해기사 역량강화*를 통해 해기사 해외 진출 지원(‘19, 20명)

* 해외선사 승선수습과정, 맞춤형 직무교육 및 해사분야 영어교육 등 제공

② 선원 복지 개선 및 외국인 선원 관리 강화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습 임금체불 선사 명단공개 및 해양원격 의료 시범사업 확대(‘18, 60척 → ’19, 80척)
- 외국인 선원 고용 미신고, 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제재 강화(「선원법」 개정) 및 온라인시스템 정비 등을 통한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구축

③ 해운물류 인력 양성

-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 사업(‘19, 18억원)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

* (現교육내용 기준) 고급과정/장기/단기/산학연계/국제교류/네트워크 강화 6개 과정
→ (수요자 기준) 청년구직자/재직자/고급 연구인력(석·박사) 3개 과정

- 해양수산취업박람회와 물류산업 청년 박람회를 통합(‘19.下, 부산)하여 해운물류기업 및 해운관련 전공자·구직자 등 취업기회 확대

중장기 목표 (~'22)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 200개 발굴 스마트 해산물류 체계 정착 및 친환경 선박시장 확보
'19년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 해양산업 스마트화 및 상용화 지원
	핵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양모태펀드 신설 및 유망스타트업 50개 육성 ②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및 시장 개척 ③ 해산물류 정보플랫폼 구축

가. 해양수산 스타트업 육성

① 해양수산 창업·투자 체계 정비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 설치된 '창업·사업화지원단'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창업 등을 총괄 지원
 - 기존 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전방위적인 투자지원체계 구축
- * ('18) 5개소(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 → ('19) 6개소(충남 1개소 신규 운영)
-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수산분야 창업기획자(Accelerator)를 선정('19, 신규도입, 10억원)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를 신설('19.2)하여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도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유희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실험·평가 장비 등을 관련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19, 10억원)

②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강화

- 해양 분야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모태펀드 신규 도입**(’19, 정부 200억원 출자)
 - * 정부 200억원+민간 86억원으로 해양분야 의무투자 비율(60%) 등을 설정
- **기존 수산펀드 규모를 확대**(’19, 70억원 추가 출자)하고 수산벤처펀드를 신설(80~100억원)하여 벤처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
- 해양수산 투자확대를 위해 투자기관협의회(24개 투자기관)를 개최(분기별)하고, 유망기업을 투자기관에 소개(팸투어/반기별)
- **해양수산 신기술기업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사항 발굴·개선 적극 추진(규제 샌드박스 등)
- 해양수산 기업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고, 해양수산 **투자박람회 개최**(’19.下, 약 60개 투자기관 참여)
- 해양수산 관련 대학·기관 등에 찾아가는 창업설명회 개최(’19, 2회) 및 기업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국제 컨퍼런스 참여 지원(’19.下)

③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촉진

-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① **소규모 R&D**, ② **투자연계 R&D**, ③ **열린 R&D** 등 신유형 R&D 사업 추진
 - * ①‘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사업’(’19~’22, 493억원) ②투자유치 성공 기업에 R&D 우선지원(’18, 7.5 → ’19, 15억원), ③ 중간기술 도입을 통한 상용화 지원
- **KIMST 해양수산 기술 평가기관 지정**(’19) 및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제도’ 도입(’20) 등을 통해 해양기업 기술·제품 공신력 제고

☞ 창업·투자 지원정책을 통해 **매년 50개 이상**(’22년까지 200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과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홍보**(’19.上)

나. 세계 친환경 선박시장 선점

①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

< 민간 선박 발주 확대 >

- 국내 최초 LNG추진 외항선 발주*('18.10) 이후, 포스코(20만톤급 벌크선, 한-호주)·남동발전(8만톤급 벌크선, 한-인니) 등 선도 사업 추진

* (선주/화주/규모/항로) 에이치라인해운 / 포스코 / 18만톤급 벌크선 2척 / 한-호주

- 노후가 심하고, 엔진 출력이 높아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선(총 321척) 대상 LNG 추진선 전환 시범사업 실시('19, 28억원, 2척)

- 「친환경선박법」 제정('20.1.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노후선박의 조기 전환권고 및 자금지원 기준 마련('19.12)

* 친환경선박 신조·노후선박대체, 기자재 설치 재정지원, 친환경 연료공급시설 지원 등

- 한국해양진흥공사 특별보증, 친환경선박 대체보조금, 친환경설비 이차보전, 항만시설 사용료 100% 감면('18~) 등 다각적 지원 확대

* 선박 대체 5척('19. 85억원),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74척 및 스크러버 61척('19. 40억원)

- 친환경 설비 구축 지원을 위해 화주·조선업체·선박유류공급업체가 투자자로 참여(450억원 직접 투자)하는 친환경설비 상생펀드* 조성

* 화주·조선업체·선박유류공급업체가 투자하여 원양선박 스크러버 장착을 지원

< 공공 선박 발주 확대 >

- 관공선 선종별 대체건조 적정 시기 도출(내구연한 기준 마련, '19.6) 후 단계적으로 노후선박을 LNG추진선으로 전환 추진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선박 신규 발주 시 LN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으로 발주하도록 의무화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18.12)

② 친환경 선박 운항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부산항 신항 및 울산항에 LNG병커링 터미널 입지를 확정('19.上), LNG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요항만 병커링 인프라* 단계적 구축(~'25)

* 부산항 1.5조원, 울산항 7천억원, 광양·인천·평택항 3천억원 등 민간·공공투자(~'25)

- LNG병커링 터미널 도입과 연계하여 LNG냉열(-162℃)을 이용한 냉장·냉동창고*, 아이스링크 등 부가산업 도입 검토

* 인천LNG기지를 활용, 인천신항내 냉장·냉동클러스터 추진 중(IPA·가스공사)

- LNG 병커링 체계 구축을 위한 연안선박 맞춤형 병커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사업화 지원('18~'22, 388억원)
- 항만별 LNG 병커링 절차와 긴급 상황 매뉴얼 제작 및 작업자 안전훈련시스템 개발 등 신규 R&D 추진('19, 5억원)

③ 친환경 시장 선도 기술개발

- 황산화물 저감장치 및 연료유 품질검증, 전기추진 선박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한 산업화 기술 확보 추진

* ①황산화물 규제대응 저감장치 실증/연료유 품질검증('18~'21, 100억원)
②미세먼지통합저감 장치('19~'23, 290억원) ③전기추진 시스템('18~'20, 45억원)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국산화 및 외래생물 유입차단을 위한 선체 부착생물 저감기술 개발 추진('19.12)

* 염분·유량·압력·UV강도 센서류 등 8개 부품('18~'21, 65억원)

- 수소, 전기 등 미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선박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19.上) 및 로드맵 수립('19.下) 추진

다.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

① 항만·선박 스마트화 가속

-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운영('19~'22, 총 396억원/광양)하고, 항만 지능화사업 추진('19~'21, 총 467억원/부산)
 - 컨테이너 자동 하역 시스템과 컨테이너 자동 이송 시스템(국토부) 개발 및 현장 실증으로 **종합적인 항만 자동화 모델** 구축(광양항)
 - ※ 노사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일자리 안전망 구축방안 병행 마련('19.下)
 - IoT 시스템 구축 등 항만 지능화 사업을 통해 **터미널간 환적 및 터미널-육상 간 연계 효율화**(부산항)
 - * 터미널 간 정보 플랫폼을 통한 서류 처리 및 왕복 운항 매칭, 터미널의 혼잡 정보 제공 등
- **자율운항선박 개발**('19.上 예타 신청/산업부 공동)을 추진하고 초고속 해상통신망을 활용한 항만-선박간 **서비스 연계·통합체계** 마련*
 - * 안전운항 서비스(e-Navigation) + 자율운항 서비스 + 물류정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

② 스마트 해상물류 생태계 구축

- 주체별 물류정보 보유 및 수요 현황을 도식화하고(물류정보 지도) 해상물류 정보 표준화 및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마련('19.下)
 - * 현재 물류주체간 정보단절로 항만·선박 등 연계 운용·서비스 효율화 제약
 - 스타트업 발굴·육성과 투자 유치까지 지원하는 **스타트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구축(울산항만공사+울산과학기술원, '19년 25억원, 총 70억원)
- ⇒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과 연계하여 육상물류까지 통합하는 「**국가 물류 스마트화 전략**」 마련('19.下)
- * 국가물류스마트화 범정부 T/F 구성('19.上, 4차위, 우리부, 국토부, 관세청 등)

라. 해양바이오·에너지, 첨단 해양장비 등 상용화

① 해양심층수·바이오 산업 규모화

-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19.12, 준공) 및 연관산업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구축('16~'24)하여 산업 활성화 추진

* R&D→제품생산·지원→창업보육·인력양성→전시·홍보 및 정보제공 등 쉼 주기적 지원

- 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도입('19.3), 미네랄추출물(고형분) 식품원료 등재('19.下) 등을 통한 대·중견기업 시장 진출 견인
- 건강·미용·의료용 신소재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해양 고세균을 이용한 바이오 수소 대량생산 기술 개발(50톤급 플랜트 준공, '19.5)
- * 홍합 접착단백질을 활용한 복합지혈제, 키틴을 활용한 치과용 차폐막 상용화 실험('19.10)

② 해양플랜트·해양에너지 상용화 기반 조성

- 한-인니 해양플랜트 협력센터를 구축('19.下)하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19, 3억원) 및 정보제공 등 국내기업 해외진출 추진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공동활용·수주 지원('19, 10억원)
- 1MW급 조류발전시스템 개발('19~'21), 5MW급 파력발전 실험역 시험장 조성(제주) 및 1MW급 해수온도차 발전플랜트 제작·성능 평가('19.下)

③ 첨단 해양장비의 사업화 촉진

- 수중건설로봇(ROV)에 대한 신뢰성·내구성 검증 및 선상지원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업화 촉진('19~'22 / 360억원)
- 무인선 기술 실험역 실증시험 실시('19.上) 및 민·관·군 협력 시범 사업 등을 통한 활용방안 발굴 추진
- 장거리(30km) 통신모뎀에 대한 성능시험 및 수중통신모뎀 기술 실험역 실증 추진('19.下)

중장기 목표 (~'22)		親해양문화 정착과 국제기구 주도국가로 위상 제고
'19년	정책방향	◆ 해양영토 관리 강화 및 해양문화 접점확대 ◆ 대양 및 극지연구 기반 마련 ◆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남북 협력사업 추진
	핵심과제	① 영해기점 설치 및 무인도서 종합계획 수립 ② 제2쇄빙연구선 건조,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 건립 ③ 평양공동선언 후속사업 준비

가. 해양영토 수호 및 親해양문화 확산

①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기반 강화

- 해양관측위성(천리안2호) 개발(관계기관 합동)* 및 장기해수면 변동, 연안 이상 현상 모니터링 등을 위한 국가광역감시망 구축 추진('15~'22)

* 국가해양위성센터 인력채용·조직정비('19.上), 정지궤도복합위성('19.下~'20.上 발사)

-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등 국내외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19.5)

- 독도 및 주변해역 조사를 통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확보하고, 독도 탐방(사회배려층, 국내 외국인 등),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19, 2억원)

* 독도-울릉도 형성원인 규명 해저탐사 추진

-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9)」을 수립('19.下)하고, 무인도서 종합실태조사('18~'27, 2,878개 도서) 추진

- 영해기점의 영구시설물* 설치('19, 4개소)를 통한 최대 해양관할권 확보 기반 마련

* 해양영토관리를 위해 해양·기상·측위 관측 장비가 설치된 시설

② 해양문화·교육 확산

- 해양문화·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19.上, 국회제출) 및 해양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추진

* 학교 및 사회 해양교육 지원, 전문강사 양성, 해양문화 산업화 지원 등

- 국립해양과학교육관*(20.5, 개관) 설립·운영 근거법률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19~'24)

* '15~'19년 / 부지 111,000㎡(건축 12,345㎡) / 1,045억원(국비926, 지방비119)

나. 해외 해양수산자원 확보 및 대양극지 연구 선도

①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조성('19년, 50억원 출자)으로 노후어선 대체 신조 지원 및 어선의 안전성·복지공간 확보(~'23년, 850억원 출자)

- 원양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19上 발의)하고, 원양어선 해외 현지도·점검(연 1회) 시행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과 안전관리규정 작성·운용 등 선사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주요 어종(다랑어·이빨고기 등)에 대한 자원 조사 등 과학적 기여, 주요 회원국과 공동의제 발굴 등 협력 강화

- 제28차 한·러 어업위원회 협상('19.3, 예정) 등을 통한 조업쿼터 확보, 관세감면 제도 개선 등 합작수산물 시장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해외어장자원조사('19.5~7), ODA 지원, 어업협정 등 정부주도적 입어정책으로 공해·주요 연안국 어장 확보

③ 제2쇄빙연구선 건조 재추진 등 극지연구 인프라 강화

- 제2쇄빙연구선 건조 에타 재추진(19.上)을 통해 극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위한 최적항로 도출* 추진

* 북극항로 분석연구(KMI·KIOST등 30개 기관) 및 선박·해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 건립*, 다부처 공동 연구과제 추가 발굴, 4차 산업 기술의 북극권 적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19.下)

*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인천) : ‘19.下, 실시설계 → ‘21, 완공 예정

③ 연구선 공동 활용 및 인도양 등 대양연구 범위 확대

- 이사부호 등 연구선 산·학·연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형연구 과제 신설(‘19.2) 및 사업 규모·연구범위 확대*

* (규모) 연 16억원 → 26억원, (연구범위) 북·서태평양 → 인도양까지 확대

- 한반도 극한 해양현상(고수온, 저염수 등) 예측 강화를 위한 북극-동아시아-서태평양 기후변화 종합관측 등 기후예측 기술개발 착수(‘19~’23)

다. 신북방·남방 등 국제 협력 강화

① 신북방·남방 정책 추진

-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신북방정책 세부과제* 지속 추진

* 북극항로 이용 활성화 연구·협력, 슬라비안카 등 극동지역 항만 개발 타당성 조사, 수산협력(조업쿼터·기술교류, 시설투자 등), 환동해 크루즈 확대 등

- ASEAN 등 신남방 국가와 글로벌 이슈(지속가능한 해양수산발전, 해양환경 관리 등) 중심의 협력 확대* 및 협력사업 발굴

* 해양쓰레기 관리개선(인니, ‘19~’21), 연안 수산자원 조성·관리 모델 구축(베트남, ‘18~’22), 연안·해양환경 관리역량 강화(캄보디아, ‘17~’19)

② 맞춤형 통상 대응 및 국제 수산규범 논의 주도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등은 기존 자유화(관세 등) 수준 내 타결 도모, 수산물 추가개방 최소화
- 수출 유망품목 상대국 관세 인하를 유도하고 수출 맞춤형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여 협상에 반영, 중장기 수출여건 개선 지원
- 항만국조치협정 이행 협의회(PSMA, '19.5), 북태평양수산물 과학위원회(NPFC, '19.4) 등 국내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 선도적 지위 확보

라. 해양수산 남북 협력 사업 준비

※ 대내외 여건 변화와 연계하여 단기 사업과 대북제재 완화 대비 사업 병행

① 평양공동선언 등 후속사업 준비

- 남북긴장 완화에 따라 서해 5도 어장확장 등 규제를 완화*하고,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어로·북측수역 입어 추진

* 서해 5도 어장(1,614km²→1,859km²), 조업시간 1시간 연장(조업규정 개정, '19.3)

-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서해 경제특구 및 동해 관광특구계획에 해운·항만인프라 확충 반영 추진

* 한강하구 해도 제작('19.1), 북측과 협의하여 수산자원·해양생태 등 조사 추진

② 남북협력 사업 추가 발굴

- 既 발굴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공동특구 연계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패키지 사업화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 남북협력 로드맵」 마련

* '한반도 해양수산 종합구상 연구' 용역('18.8~'19.8, KMI) 및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분기별)를 통해 추진 전략 도출